

외교

[NEWS&VIEW] 사드 뒤편... 韓·美·中 '막후 외교 삼국지'

임민혁 기자 전현석 기자

입력 : 2016.02.25 03:00

韓·美, 사드 배치 추진해 중국의 대북제재 끌어낸 효과
中은 한국엔 협박, 거래는 미국과
美 "北비핵화땀 사드 불필요" 중국과 협상 카드로만 쓸 여지

美·中, 한반도보다 큰 틀에서 사드 '협상카드화'할 수도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둘러싼 한·미·중 3국의 논리와 이해관계가 꼬이면서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후 당장이라도 배치를 진행할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對北) 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이 급하게 움직였다. 한·미의 '합작'이 중국의 행동을 유인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중국을 끌어내는 '지렛대'로 사드를 활용했다는 측면과 더불어 "안보리 제재와 무관하게 국민 안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던 우리 정부의 논리가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우리 정부에는 협박만 하고 '거래'는 미국과만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복잡한 다차원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23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장관회담과 전날 주한 중국 대사의 '공개 협박' 파동은 이 같은 '사드 삼국지'의 단면을 보여줬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논의의 배경에 대해 "북한이 공개적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하고 핵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국의 반발과 상관없이 자위권 차원의 사드 배치는 진행할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케리는 곧이어 "우리는 사드 배치에 급급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며 "비핵화에 도달할 수 있다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는 중국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면 사드 배치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미국의 이런 입장 때문에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사드 한·미 공동 실무단 구성에 관한 양국 간 약정 체결은 갑자기 연기됐다.

토머스 벤덜 미8군사령관은 이날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찾아와 약정 체결 연기와 관련한 미측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이날 케리와의 회동 뒤엔 사드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한 채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어떤 행위도 안 된다"고만 했다. 대신 중국의 '사드 경고'는 한국을 타깃으로 해서 나왔다.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가 23일 김종인 더민주 대표를 만나 "한·중 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협박'한 것이다. 그는 지난 20일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를 대사관저로 초청해서도 같은 언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사드 배치가 양국 관계의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했다고 한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중국이 한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사드를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사드를 둘러싼 갈등은 미·중이 직접 풀도록 유도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동유럽 MD(미사일 방어) 배치 사례를 참고해 사드도 단계적·조절적(Phased & Adaptive Approach) 방식으로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당시 MD에 반대하던 러시아는 배치 국가인 폴란드·체코가 아닌 미국과 직접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국제질서의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모든 글로벌 이슈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미·중이 한반도가 아닌 더 큰 틀에서 사드를 '협상 카드'화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한국의 이해는 무시되고 '대국(大國) 논리'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중국의 남중국해 미사일 배치와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를 맞교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 이날 미·중 외교장관 회담의 상당 시간은 남중국해 문제에 할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 논의 등과 관련해 사드 협의가 늦어질 수 있지만, 북핵 위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배치 자체를 철회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용이라는 '안보 논리' 외에,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MD 체제 일환이라는 '패권 구도 논리',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 유도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실용외교 논리'가 얽히고설키면서 우리도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키워드 정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란?

[키워드 정보] MD(미사일방어체제)란?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